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 국내·외 정책동향

- 해외
- 국내



## 해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스웨덴, 조부모에게 양도 가능한 유급 육아휴직 제도 도입<sup>1)</sup>

- 스웨덴은 2024년 7월, 조부모가 손자녀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조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스웨덴은 유럽에서 조부모가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첫 국가가 되었다.
- 이 제도는 비단 조부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본인에게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일부를 '자녀의 법적 보호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조부모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가족 내 구성원 중 조부모가 가장 크게 관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스웨덴의 여러 국내외 언론에서는 주로 '조부모 육아휴직 제도'라고 칭한다. 본 원고에서도 조부모가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관점에서 스웨덴의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현재 스웨덴의 유급 육아휴직 급여는 사회보험으로 자녀 한 명당 총 480일이 부모에게 주어지며, 자녀가 만 12살이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주어진 기간 중 390일은 당사자의 소득에 기반하며 병가 급여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대개 신청자 소득의 약 80% 정도에 이르는데, 일 최대 1,218크로나(한화 약 155,000원)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나머지 90일은 일괄적으로 고정된 금액, 일 180크로나(한화 약 23,000원)가 지급된다.
- 병가 급여 수준에 상응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부모는 자녀 출산 전 최소 240일 연속으로 일하고 연 임금으로 최소 85,000크로나(한화 약 1,086만 원)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동일한 직장에서 일했거나 계속 동일한 금액의 임금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만약 최소 240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첫 180일은 일 250크로나(한화 32,000원) 정도만 받는다. 소득이 없거나 학생일 때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할 때도 일 250크로나(한화 약 32,000원)가 지급된다.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박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 육아휴직의 양도 범위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부모끼리만 양도할 수 있었는데, 새로 시행된 제도는 다른 개인에게도 양도할 수 있게 되어 그 개념적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함께 양육하는 부모는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45일, 한부모가족인 부 또는 모는 90일을 양도할 수 있다.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 중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dubbeldagar)도 있다. 이전에는 자녀 출산 후 12개월 중 30일이었는데, 새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녀 출산 후 15개월 중 60일로 확대되었다.
- 이에 따라 조부모가 손자녀 육아를 맡으면 손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조부모가 유급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은퇴한 조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는 수령하고 있는 연금액에 기반해 산정된다. 그리고 유급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다른 구직 또는 학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해당 제도는 스웨덴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가족 간 양도에 관한 법안」을 제출한 뒤 의회가 지난 12월에 가결하였다. 2023년 9월에 해당 법안이 상정되었을 당시 스웨덴의 여러 노동 단체들은 이 정책이 국가에서 ‘보모 시스템(nanny system)’을 조장해 실질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을 먼 친척이나 전문 보모에게 양도하는, 즉 육아가 가까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외주를 주는 문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 이에 대해 2024년 10월 안나 텐예(Anna Tenje) 노인·사회보장부 장관(Minister for Older People and Social Security)은 스웨덴 의회가 정부에게 정책안이나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문을 제기하는 질의응답 절차에 참석해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를 일부 양도하는 제도가 외부 육아 보조 인력을 고용하는 대가로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나 텐예(Anna Tenje)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복지 사기 및 복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범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새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가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넓혀주고 지원해 주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 이 밖에도 스테판 포르스베리(Stefan Forsberg) 스웨덴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 육아 관련 사회보험운영담당국 이사는 이번 새 법의 목적은 부모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과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추진된 개혁은 한부모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설명했다.
- 스웨덴은 1974년 아버지가 된 남성 근로자도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일하는 부모가 자녀 출산 후 특히 신생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50여 년이 지난 2024년, 부모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에게도 육아휴직 일부 기간을 양도하고 당사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스웨덴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실제로 가족 외 타인이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녀 육아에 참여하고 유급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가정이 많아질지는 향후 통계 자료나 정부 보고서 등과 같은 자료를 통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AP News (2024.7.1) "Swedes take a new step in parental leave. Grandparents can now get paid to take care of grandkids", <https://apnews.com/article/sweden-parental-leave-grandparents-stepparents-a2dc2a77530cf8f52a39bc8c830482ec> (접속일: 2024.12.17.)
- Euronews (2024.9.26) "Sweden first pioneered parental leave. Now it's the first country to give grandparents paid leave", <https://www.euronews.com/next/2024/09/26/new-swedish-law-enables-government-funding-for-babysitting-grandparents> (접속일: 2024.12.17.)
- EuroWeekly (2024.9.26) "Grandparents in Sweden now eligible for paid parental leave", <https://euroweeklynews.com/2024/09/26/grandparents-in-sweden-now-eligible-for-paid-parental-leave/> (접속일: 2024.12.17.)
- Försäkringskassan (스웨덴 사회보험청 공식웹사이트) "Föräldrapenning (Parental allowance)"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foraldrapenning> (접속일: 2024.12.17.)
- SVT (2024.7.1) "Nu kan farfar vara föräldraledig – här är de nya reglerna (Now grandfather can take parental leave – here are the new rules)", <https://www.svt.se/nyheter/lokalt/dalarna/nu-kan-farfar-vara-foraldraledig-har-ar-de-nya-reglerna> (접속일: 2024.12.17.)

## 아일랜드, 여성 정치 참여 촉진을 위한 총선 성별 할당제의 효과와 한계<sup>2)</sup>

- 아일랜드에서는 2024년 11월 제34대 하원(Dáil Éireann)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여성 의원은 전체 174명 중 44명을 차지하여, 전체의 약 25%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는 서유럽 평균 여성 의원의 비율인 37%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지난 2012년부터 아일랜드에서 시행된 성별 할당제가 실제로 여성 정치인의 수를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아일랜드 의회의 성별 할당제 제도 도입 배경 및 이행 현황
  - 아일랜드는 의회 내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정치자금 선거법(Electoral Amendment(Political Funding) Act 2012)을 개정하여 성별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 법은 각 정당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명단에 최소 30%의 여성과 30%의 남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당은 정부로부터 받는 운영 자금의 50%를 삭감당하게 된다.
  - 2016년 총선부터 처음 적용된 30% 할당제는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2011년 전체 정당 평균 15%에서 2016년 모든 정당이 30%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여성 의원 선출 또한 2011년 15%에서 2016년 22%로 증가하는 등 제도 도입 초기에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는 여성 의원 비율이 22.5%에 머물러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2024년 11월 총선은 2023년 40% 성별 할당제가 도입된 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첫 선거였고, 여성 후보와 의원 비율 증가가 기대되었으나 여성 의원 비율은 25%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 아일랜드 여성협의회(National Women's Council)의 올라 오코너(Orla O'Connor) 이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는 아일랜드 정치에서 여성을 위한 진정한 돌파구가 아직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할당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많은 여성 후보자가 새롭게 시행한 40% 성별 할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늦게 등록했던 만큼, 여성 후보가 충분한 선거 자원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당이 조기에 여성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일랜드는 2012년에야 성별 할당제를 도입하면서 여성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훨씬 일찍 성별 할당제를 도입한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약 20년 정도 늦게 관련 제도를 시행했다. 선거구 수준의 전략적 개입,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멘토링, 캠페인 노하우 전수 등 타 국가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 정치 참여를 증진하고 성별 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서유럽 국가 사례**

- 벨기에에는 1994년 여성 할당제를 최초로 입법화했으며, 2002년 개정을 통해 모든 정당이 후보자 명단에 여성과 남성을 동수로 배치하고, 각 명단의 상위 순위에도 여성과 남성을 각 50%씩 동등하게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성별 할당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위 후보자 순위에도 성별 할당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려 한 것이다. 그 결과 여성 의원 비율이 할당제 도입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후보자 명단과 상위 순위에서의 성별 할당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입증했다.
- 영국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성별 균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Labour Party)은 1990년대 중반부터 특정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를 선정할 때 여성 후보만 포함된 명단에서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전 여성 후보 명단(All-Women Shortlists)’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노동당은 1997년 총선에서 여성 의원 비율을 9%에서 18%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시행을 통해 2019년에는 노동당 전체 의원 중 약 51%가 여성 의원으로 구성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아일랜드의 이번 총선 결과는 40% 성별 할당제가 처음 적용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원 비율이 25%에 머물며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주었다. 그 원인으로 여성 후보자들이 실제로 선거 운동을 준비하고 활동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선거와 상원(Seanad Éireann)에도 성별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많은 정치인이 정치 경력을 시작하는 출발점인 지방선거에 성별 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참고문헌 •**

Belgian Exceptionalism (Devroe, Erzeel, Meier, & Wauters, 2021), “The Long-Term Effects of Gender Quotas in Belgium”, <https://www.taylorfrancis.com/chapters/oa-edit/10.4324/9781003104643-4/long-term-effects-gender-quotas-belgium-robin-devroe-silvia-erzeel-pe-tra-meier-bram-wauters> (접속일: 2024.12.19.)

Houses of the Oireachtas (2020.9.1.), “Gender equality in politics”, [https://data.oireachtas.ie/ie/oireachtas/communications/education/2020/2020-09-01\\_gender-equality-in-politics-less-on-plan\\_en.pdf](https://data.oireachtas.ie/ie/oireachtas/communications/education/2020/2020-09-01_gender-equality-in-politics-less-on-plan_en.pdf) (접속일: 2024.12.19.)

• 참고문헌 •

Irish Statute Book (2012.7.28.), "Electoral (Amendment) (Political Funding) Act 2012",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12/act/36/enacted/en/html> (접속일: 2024.12.19.)

Labour List (2019.12.31.), "51% of Labour MPs are women. What now for all-women shortlists?", <https://labourlist.org/2019/12/51-of-labour-mps-are-women-what-now-for-all-women-shortlists/> (접속일: 2024.12.19.)

The Guardian (2024.12.6.), "Irish parliament has worst gender diversity in western Europe, study find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dec/06/irish-parliament%20parliament%20has%20worst%20gender%20diversity%20in%20western%20Europe,%20study%20finds%20parliament-has-worst-gender-diversity-in-western-europe-study-finds> (접속일: 2024.12.19.)

## 네덜란드,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 시행 이후 현황<sup>3)</sup>

- 네덜란드에서는 2024년 7월부터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Sexual Offences Act)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사법부는 관련 법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한 바 있다. 대국민 캠페인은 개정된 법에 담긴 주요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몇 주간 진행되었다. 본 원고는 네덜란드의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실질적인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네덜란드에서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우선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의 법적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은 형사 범죄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조롱하는 언행, 개인의 존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을 포괄한다. 또한 온라인 성희롱,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성적으로 협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 특히 온라인상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취약한 상태에 있는 16세 및 17세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했다. 성적인 목적을 갖고 실제 만남을 제안했는지가 관건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았다.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실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적 학대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보다 효과적인 조기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개정된 법에서는 성범죄의 개념적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다. 우선 강간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더 이상 공소시효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강간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강제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이 적용된다. 아동이 12세에서 16세 사이일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최대 형량이 6년으로 증가했다.

3) 박서희, 레이든 대학교 정치학과 강사



- 또한, 개정된 법은 ‘합의’에 기반한 성관계라는 개념을 포함시켰다. 언어든 신체적으로든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면 범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네덜란드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De Volkskrant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에 시행되던 법은 구시대적 제도였으며, 개정된 법에서는 성범죄를 정의하는 개념적 장벽이 훨씬 낮아진다고 보았다. 반면, 실제로 쌍방 합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나 합의에 기반한 성관계였는데도 이후 기소되어 법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실제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024년 말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법원이 공공장소에서 한 여성을 괴롭히고 위협한 남성에게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30대 초반의 이 남성은 한 여성을 따라오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몇 달 전 기소되었고, 이후 법원에서 100유로(한화 약 15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로테르담 법원은 만약 해당 남성이 재범을 저지를 경우 추가 벌금 180유로(한화 약 27만 원)를 부과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네덜란드에서는 공공장소 질서나 법률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특별단속공무원(Buitengewoon opsporingsambtenaren, BOA)이 있는데, 이들이 순찰 중 피해 여성이 불쾌함을 표시하고 방어적인 동작을 취하는데도 가해자가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해당 법에 의거하여 연행한 것이다.
- 또 다른 대도시 중 한 곳인 위트레흐트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공무원에게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취하면서 성희롱한 결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판사로부터 2일간의 수감,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50유로(한화 약 22만 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네덜란드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네덜란드의 개정된 법의 시행은 제도적인 성과를 이루었지만, 성범죄를 근절하기까지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네덜란드에서는 16세 이상 약 170만 명이 성적으로 선을 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조사 결과보다는 감소한 수치이지만, 2020년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8%인 12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욕적인 성적 암시가 담긴 발언이나 농담과 같은 오프라인 성적 협박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약 5%가 온라인에서 성적 협박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나체 사진이나 성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거나 나체 사진을 보내라는 강요를 받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응답자의 4%가 실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 연도 기준 약 52만 명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 키스 및 기타 성적 행위를 당했음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 네덜란드 정부는 효율적인 법 시행을 위해 이미 경찰 및 검찰청과 같은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제도 이행 절차에 돌입했는데, 해당 법의 운영 지침 개발, 정보통신기술(ICT) 재정비, 그리고 관계자 직무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약 25,000명의 경찰서 접수 담당자, 성범죄 담당 수사관 등 경찰 관계자들이 개정 시행된 성범죄 관련 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 밖에도 사법절차에서도 개정된 법을 적용한 실제 판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네덜란드 내 공공장소 및 온라인상에서 성범죄 감소를 기대해 볼만하다.

• 참고문헌 •

- CBS (2024.11.25) "Over 1.7 million victims of sexually transgressive behaviour", <https://www.cbs.nl/en-gb/news/2024/48/over-1-7-million-victims-of-sexually-transgressive-behaviour> (접속일: 2025.1.19.).
- De Volkskrant (2024.3.21.), "Bij de nieuwe zedenwet is 'nee' in bed een harde grens", <https://www.volkskrant.nl/nieuws-achtergrond/bij-de-nieuwe-zedenwet-is-nee-in-bed-een-harde-grens~b4752dc2/> (접속일: 2025.1.19.).
- Dutch News (2024.7.1.) "New modernised and consent-based sex offence law takes effect", <https://www.dutchnews.nl/2024/07/new-modernised-and-consent-based-sex-offence-law-takes-effect/> (접속일: 2025.1.19.).
- Dutch News (2024.11.26.) "Some 12% of the Dutch are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https://www.dutchnews.nl/2024/11/some-12-of-the-dutch-are-victims-of-sexual-harassment/> (접속일: 2025.1.19.).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24.3.20) "New act to address sexual offences enters into force on July 1, 2024",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4/03/20/new-act-to-address-sexual-offences-enters-into-force-on-july-1-2024> (접속일: 2025.1.19.).
- NOS (2024.10.7) "Geldboetes en celstraf in derde rechtszaak over seksuele straatintimidatie", <https://nos.nl/artikel/2539956-geldboetes-en-celstraf-in-derde-rechtszaak-over-seksuele-sstraatintimidatie> (접속일: 2025.1.19.).
- The Guardian (2024.10.3) "Dutch court fines man in first conviction under new sexual harassment law",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oct/03/netherlands-dutch-court-rotterdam-man-fined-sexual-harassment-law> (접속일: 2025.1.19.).

## 호주의 연금 성별 격차로 본 구조적 성 불평등 문제와 과제<sup>4)</sup>

- 호주의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적은 연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약 25% 더 적은 잔액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성별 연금 격차는 임금 격차와 고용 형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 호주에서는 남성이 1호주달러를 벌 때, 여성은 평균적으로 0.89호주달러를 벌고 있어 연간 약 12,038호주달러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또한, 남성과 여성 간 전일제 평균 임금 격차는 11.5%p에 달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시간제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 오랜 기간 호주의 노동조합과 여성운동 단체들은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을 지적해 왔다. 이는 연금 기여금 감소뿐만 아니라 복리 효과로 인한 자산 증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연방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유급 육아휴직 동안 연금 보장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케이티 겔러저 호주 여성부 장관은 이 정책이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4) 조혜인, 모내시대학교(Monash University)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예방센터 책임연구원



떠날 때 발생하는 퇴직 소득 감소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아만다 리스윅스 호주 사회서비스부 장관 또한 이 조치가 성평등을 우선 고려하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호주 연금 기관 협의회(ASPA)는 이 외에도 젠더폭력 관련 연금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며,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정부에 신속한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연금 사망 보험금(death benefits/cover)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가해자가 젠더폭력 범죄로 유죄판결 이력이 있거나,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호주의 법률(예: Family Law Act 1975 및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84)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De facto relationships)에 있는 경우, 재산 분할, 생활비 청구, 자녀 양육 및 지원, 연금, 그리고 상속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금 사망금을 수급하는 행위를 폭력의 연장으로 간주하며, 법안 개정의 목적은 단순히 가해자의 재정적 이익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호주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호주 정부가 발표한 유급 육아휴직 기간 중 연금 보장금 지급 정책은 여성들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성평등 증진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젠더폭력 관련 법적 허점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개혁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4.3.7). Super on Paid Parental Leave and expansion of the scheme. <https://www.dss.gov.au/paid-parental-leave/super-paid-parental-leave-and-expansion-scheme> (접속일: 2025.1.19.)
- The 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 (2024.8.8). Super sector calls for urgent legal reform to stop abusers getting victim's super. <https://www.superannuation.asn.au/media-release/super-sector-calls-for-urgent-legal-reform-to-stop-abusers-getting-victims-super/> (접속일: 2025.1.19.)
- Webster, S. (2024.10.4). Super and the gender gap: closing the retirement savings divide. <https://www.theage.com.au/money/super-and-retirement/super-and-the-gender-gap-closing-the-retirement-savings-divide-20241003-p5kfoe.html> (접속일: 2025.1.4)

## 영국, 여성 생식 건강의 현실과 정책과제<sup>5)</sup>

- 2024년 12월 11일 영국 여성과 평등 위원회(Women & Equalities Committee)는 여성 생식 건강의 현실과 의료 체계 내 문제를 조명한 '여성의 생식 건강 상태(Women's

5)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개발보건학 석사

Reproductive Health Condition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여성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자궁근종, 다낭성 난소 증후군, 과다 월경 출혈 등과 같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의료 제공자가 생식 건강 상태의 특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인력의 전문성과 자원이 부족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영국 의료 체계 내 여성 혐오적 태도와 연구 및 지원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영국 여성의 약 3명 중 1명은 심한 월경 출혈을 겪고 있으며, 10명 중 1명은 자궁내막증이나 자궁선근증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복통이 종종 월경통으로 단순히 치부되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 질환을 앓는 여성들은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며,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병명을 알지 못한 채 상태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치료 시기를 놓친 여성들은 영구적인 손상이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높은 유병률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성별 고정관념, 사회문화적 요인, 남성 중심의 연구, 편향된 의학 지식에서 비롯된 의학적 여성혐오(Medical Misogyny)가 여성 생식 건강 개선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의학적 여성혐오는 여성이 심각한 통증이나 생식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이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는 의료 체계 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아 여성 생식 질환의 오진율을 높이고, 진단과 치료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 조사에 참여한 한 여성 환자는 “초경 때부터 월경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참고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들어왔다”고 말하며, 의료계가 여성의 통증을 과소평가하거나 정상화(normalization)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궁내막증과 같은 질환에 대해 의료 종사자들의 교육 부족, 제한적인 연구와 치료 방식, 사회적 낙인(pervasive stigma)으로 인해 여전히 질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적절한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영국 양당 협력 위원회(Cross-party committee)에서는 성교육(Relationships, sex and health education)에서 월경과 생식 건강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으며, 초경 시기에 비해 성교육 시기가 늦은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여성 생식 질환에 대한 정보를 비공식 경로에서 얻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잘못된 정보 제공과 질병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초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성교육 시기를 재조정해야 하며, 월경 및 부인과 건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남성 청소년들에게도 여성 생식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여성 생식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2022년 발표한 여성 건강 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의 일환으로, 1차 시행 연도에 여성건강센터(Women’s Health Hub)를 신설하여 센터에 근무하는 보건 전문가들에게 월경 및 부인과 건강에 대한 책자를 배포하여 자궁내막증과 월경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2차 연도에는 해당 교육 자료를 개정하고 자궁내막증과 월경통 관련 연구를 지원하여

이러한 증상 및 질환의 진단 시간을 단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미비와 자원 부족으로 인해 진전이 더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생식 건강 상태의 치료 및 진단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조기 진단 개선이 영국 여성 건강 전략의 핵심 성과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영국 여성의 생식 건강 개선에 있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NHS는 진단 및 치료 개선 요구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보건의료 종사자들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진료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영국 보건사회복지부가 1차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여성 생식 건강 전문성을 개발하고, 질환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식 건강에 대한 교육 기금을 늘리고, 1차 의료를 제공하는 주치의(General Practice)가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산부인과를 의무 교육 과정으로 지정하고, 여성 생식 건강 전문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며 영국 NHS와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에서 모든 생식 건강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여성 생식 건강 증상 및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새롭고 더 나은 진단 도구 및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성 그룹과 관련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자금 지원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임상 학계에서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영국 정부는 여성 건강 전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야심 차고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향후 영국에서는 여성 생식 건강에 대한 국가적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모든 여성 집단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 BBC (2024.12.11.), "Medical misogyny' sees women told to 'put up' with pain", <https://www.bbc.com/news/articles/c23v42jdle7o> (접속일: 2025.1.16.)
- Healthcare Outlook (2024.9.2.), "Misogyny in Medicine", <https://www.healthcare-outlook.com/healthcare-insights/misogyny-in-medicine> (접속일: 2025.1.16.)
- House of Commons (2024.12.6.), "Women's reproductive health conditions", <https://committees.parliament.uk/publications/45909/documents/228040/default/> (접속일: 2025.1.16.)
- The Guardian (2024.12.11.), "Medical misogyny' condemns women to years of gynaecological pain, MPs told",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4/dec/11/medical-misogyny-condemns-women-to-years-of-gynaecological-pain-mps-told> (접속일: 2025.1.16.)
- The Standard (2024.12.11.), "What is medical misogyny? Government and NHS face 'urgent wake-up call' on women's health services", <https://www.standard.co.uk/news/health/medical-misogyny-nhs-government-report-b1199437.html> (접속일: 2025.1.16.)
- UK Parliament (2024.12.11.), "Medical misogyny' is leaving women in unnecessary pain and undiagnosed for years", <https://committees.parliament.uk/committee/328/women-and-equalities-committee/news/204316/medical-misogyny-is-leaving-women-in-unnecessary-pain-and-undiagnosed-for-years/> (접속일: 2025.1.16.)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국내\*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경영문화 확산 노력

- 여성가족부는 '2024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힘.
  -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유연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에 도입됨.
  - 2024년은 2023년보다 15.9% 증가한 2,869개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2,464개 기업이 인증 기준을 통과했음.
  - 2024년 12월 기준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은 총 6,502개로 2023년 대비 591개가 늘었으며, 이중 중소기업은 4,552개로 전체 인증기업의 70%를 차지함.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12.1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306](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306)

#### 여성가족부, 2024년 여성친화도시로 16개 지자체 신규 지정

- 여성가족부는 '2024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지정 협약식'을 개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신규 지정된 16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었다고 밝힘.
  -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2009년 2개→2015년 66개→2021년 95개→2024년 106개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12.1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311](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31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 확대 등 저출생 극복과 위기가족, 폭력 피해자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

- 여성가족부는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I) 합동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실시함.
- 이번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 등 3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보고함.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1.0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320](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320)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늘리고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추진

-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힘.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함.
- 또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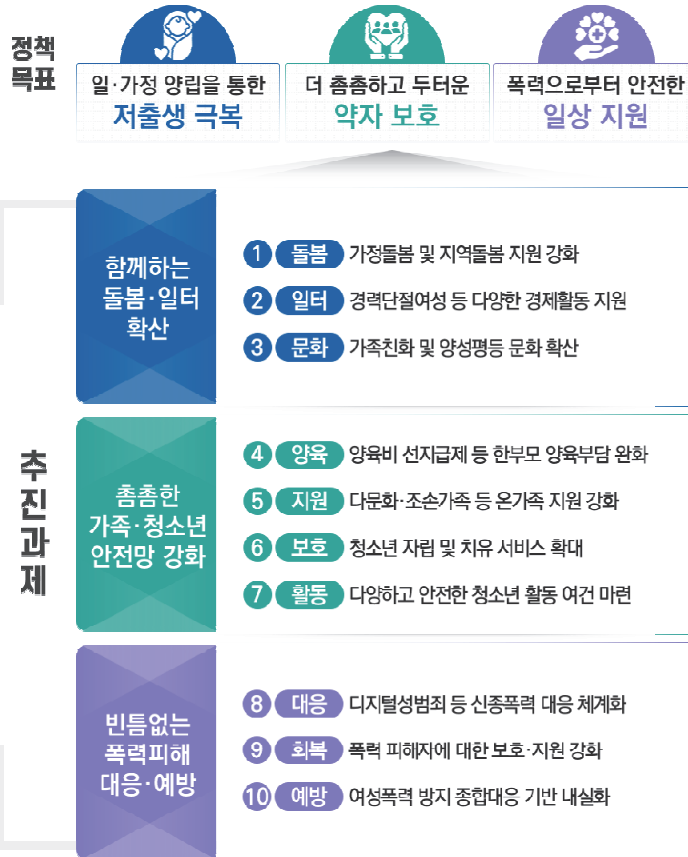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1.1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321](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321)

## 여성가족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여성가족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함.
-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1) 함께하는 돌봄·일터 확산, 2) 촘촘한 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3) 빈틈없는 폭력 피해 대응·예방 등 3가지를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함.

## 비전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그림〉 2025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 방향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1.1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10329](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10329)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변화를 담은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함.
-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으로, 기존 수록된 △여성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 관련 주요 정책·사업과 고용 동향을 최신화하였으며, 새롭게 ①향후 여성 인력 활용 촉진이 필요한 주요 국가전략 기술 분야의 고용 동향과 여성 벤처기업 현황을 수록하고 ②여성 일자리의 질적 분석에 필요한 근로 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봄.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1.1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332](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332)

##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 여성가족부는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촉진 및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202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힘.
- 2025년에는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2024년 79개 → 2025년 89개), 직업교육훈련 참여 수당 월 10만 원(최대 4회) 신설, 인턴 고용유지장려금 확대(2024년 1인당 380만 원 → 2025년 460만 원) 등을 실시할 계획임.
- 새일센터에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5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1.2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335](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335)

## 여성가족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록한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함.
-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음.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2.0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348](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348)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힘.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 육아휴직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02.1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495](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495)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 지표 달성 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 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강화 방안,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함.
- 2024년 발표한 저출생 대책 과제의 대부분을 이행함에 따라, 2025년에는 점검·관리 체계를 성과(outcome)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 시작으로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 과제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점검함.
  -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은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1)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2) 양육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3) 출산·양육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등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함.
  - 초고령화 대응 방향은 정책 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1) 고용·소득, 돌봄·주거, 2) 기술·산업의 3대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5.01.23]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421&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